

## 밀항, 국경 그리고 국적 : 손진두 사건을 중심으로

김 원 (한국학중앙연구원)

1. 문제제기
2. 재일조선인과 밀항
3. 한국인 원폭피해자와 국경
4. 식민주의, 오무라수용소 그리고 국적
5. 결론

### 1. 문제제기

본 연구는 1970년 한국인 원폭피해자 손진두의 밀항, 오무라수용소 수감과 수첩재판을 통해 원폭피해자로 인정받게 된 맥락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945년 8월 피폭됐으나 한국으로 송환됐던 원폭피해자 손진두는 1970년 밀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해 약 8년에 걸친 법정투쟁 끝에 원폭피해자로 인정받게 된다. 이 사건은 한국인 원폭피해자가 일본 정부로부터 피폭자(히바쿠샤)로 법적인 인정을 받은 대표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1,000여건에 이르는 국사편찬위원회에 기증된 당시 재판 기록, 탄원서, 일본 전국의 손진두 지원단체의 소식지, 관련 기록은 이 사건이 손진두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일본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존재가 알려진 ‘출발점’ 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질문은 ‘왜 손진두 사건이 당시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가’ 이다. 60년대 후반 만들어진 한국인 원폭피해자 조직은 존재했으나 큰 영향력을 지니지 못한 조건이었다. 한국과 일본 정부도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판단,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속지주의 원칙에 입각해, 일본내 거주하지 않는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에게 ‘원폭수첩’, 을 부여하지 않았다. 즉 원폭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손진두 사건은 70년대 내내 일본 지원 단체의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한국의 경우 유신 시기라는 권위주의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이 쉽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왜 손진두 사건이 일본 시민사회에서 지속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느냐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다.

본 연구는 손진두 사건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원인을 1960년대 후반 이후 일본 사회 내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60년대 후반 베헤렌(ベトナムに平和を!市民連合) 등 반전운동 흐름은 무당무파(無黨無派), 시민주의, 개인의 권리의식에 입각한 자립적 운동에 기반해 안보투쟁 시기와 달리, 입관체제 반대, 오무라수용소 해체 등 과거 일본의 식민주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으며, 재일조선인의 국적 문제, 김동희 망명 사건을 계기로 대두된 오무라 수용소 문제 그리고 입관법 재제정을 둘러싼 일본 체류 아시아인에 대한 전쟁과 식민주의 책임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이전 시기 일본 사회가 전후민주주의와 평화 국가라는 프레임 아래에서 망각해온 과거가 ‘현재’ 의 문제로 실감되기 시작했다.

정리하자면 한국과 일본 정부는 안보, 한미일동맹, 경제협력, 속지주의 등의 명분으로 한국인 원폭피해자를 하나의 의미로 단일화하고자 했다. 이는

경제협력과 일본내 총련과 좌파 단체의 존재를 이유로 원폭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했던 한국 정부도 유사했다. 하지만 손진두의 밀항, 오무라수용소 수감과 수첩재판이라고 불린 사건은 한일정부가 단일화하고자 했던 원폭피해자라는 잉여적 존재의 가시화, 더 나아가서 냉전 동아시아에서 망각되어온 식민주의, 아시아, 밀항과 국경이란 경계를 서서히 가시화시켰던 ‘정치성을 지닌 사건’이라고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8년에 걸친 손진두의 수첩재판과 승소는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와 더불어, 냉전 동아시아에서 망각되어온 식민주의 시기 일본 거주 원폭 피해자의 존재, 이들의 월경을 입관법을 법적 근거로 금압하던 관행 그리고 전후 일본 민주주의가 망각한 아시아를 회수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비유하자면 ‘국경을 넘는 정치적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1970년 손진두의 밀항, 출입국관리법위반, 가석방, 입원, 오무라수용소 수감, 재판과정에서 나온 일본 시민단체의 소식지, □시민회□로 불린 손진두 지원 단체의 사건에 대한 의미 부여, 공판기록과 손진두의 진술서, 60년대 후반부터 집중적으로 일본 시민사회내 손진두 사건, 입관체제, 오무라수용소, 재일조선인 문제에 대한 견해를 담은 신문과 저널(일본조선연구소 기관지 □朝鮮研究□, □朝日ジャーナル□), 기관지(□ベ平連ニュース 縮刷版, 1965~1974)□ 등을 통해 왜 일본 시민사회가 이 시기 손진두의 밀항, 수감 그리고 재판을 ‘사건’으로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다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원폭피해자 문제는 널리 알려진 문제가 아니다. 2011년 한국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오랫동안 원폭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문제를 방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며, 2016년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 당시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위령비 방문 여부가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가 대두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조차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폭심지를 중심으로 수많은 인명이 사망했고, 원폭휴유증(원폭증)으로 지금도 고통 받고 있다. 패전 이후 일본은 귀환자, 전쟁피해자 등으로 원폭피해의 특수성이 부각되지 않았다. 1953년 비키니섬에서 일본인 어부의 피폭으로 원폭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하지만 원폭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다루는 일본 정부의 정책이 미치는 범위를 의미하는 이른바 ‘시정권’ (施政權)은 대상자를 일본국적을 지닌 원폭피해자로 제한시켰다. 1964~1965년 오키나와 원폭피해자 문제가 불거져 당시에 일본 국적이 아닌 이들에 대한 배보상이 이뤄졌으나 한국인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적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명확했다. 1968년 엄분연과 임복순 두 여성이 일본으로 건너가 원폭피해자에 대한 건강수첩을 신청했으나 일본 후생성은 이를 각하했다. 이는 한편으로 원폭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을 둘러싼 시정권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원폭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과거 일본 정부가 수행한 전쟁에 대한 배보상 문제가 아닌, 원폭이라는 특수한 피해를 입은 일본 국적을 지닌 개인에 대한 ‘국내 복지법 운영의 문제’로 파악했던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는 후술할 손진두의 수첩 재판을 둘러싼 쟁점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1971년 출입국관리령을 위반해서 강제퇴거 조치를 당할 상황에 처한 손진두는 일본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 피폭자로 자신을 인정해달라는 건강수첩 발부를 신청한다. 당시 재류중이던 후쿠오카현과 후생성 모두 판단을 유보하고 상황을

연기시키는 와중인 1972년 7월 4일, 후쿠오카재판소는 피폭자건강수첩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린다. 이후 손진두와 시민단체는 신청 각하에 대한 취소소송과 강제퇴거 취소소송을 오무라수용소 수감기간(1973~1975), 치료기간(1976~1978) 내내 전개하게 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 사건과 재판을 국내복지법의 시정권 문제로 파악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손진두와 일본 시민단체의 주장은 건강수첩 배부와 ‘히바쿠샤’로 인정하라는 요구와 더불어, 원폭법이 규정하는 목적이자 취지인 ‘국가보상적 배려’란 측면을 더불어 요구했다. 하지만 법이 정한 원폭법의 ‘특수한 성격’ 역시 문제적이었다. 이 법에서 특수한 성격이란 일반 전쟁과 달리 “방사능 피해”를 지칭하는 것이며, 손진두 재판 이후 79년 발표된 바에 따르면 전쟁의 개시와 수행에 대한 국가의 불법성이나 원폭투하 책임이 있는 미국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즉 원폭법 자체가 전쟁 이전 일본 국가를 인정하는 전제 아래에서 규정되고 해석된 것이다. 바꿔말하자면 ‘히바쿠샤’는 식민주의/전쟁의 피해자가 아닌, 원폭에 의한 방사능의 피해자로 이해되고 인정된 것이다. 밀항, 오하라수용소 수감, 재판으로 이어진 손진두 사건은 이러한 조건 속에서 전개된 것이다.

손진두 사건은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존재를 일본 사회에 알리게 된 전환점이자 한국원폭피해자운동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왜 그의 밀항, 수감, 재판이 ‘문제시’되었는가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전술한 바와 같이 양국 정부도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가 수면 위에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피해 당사자인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집단적인 운동은 아직 취약한 상태였다. 바꿔말하자면 손진두 사건은 예외적인 동시에 원폭피해자 개인의 결단에 의한 것이었다.

기존 연구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손진두 사건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해석하고 있다. 첫 번째, 손진두 사건 이전에 일어났던 손귀달의 밀항 시도, 1959년 이래 피폭자의 밀항 시도가 70년대 손진두 재판의 기원이라는 해석이다(이토 다케시). 두 번째 해석은 손진두의 수첩 재판을 지원했던 히라오카, 카와무라, 나카지마 다츠미 등의 개인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해석이다. 히로시마 □중국일보□ 기자였던 히라오카는 패전 이전 식민지 조선 체험, 1966년경부터 한국인원폭피해자에 관심을 지니게 됐고, 의사인 카와무라도 오리츠즈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경험했다. 재판을 지지, 지원한 관련자들은 손진두 사건 이전에 원폭피해자들과 조우하며 일본의 ‘식민지 책임’ 문제를 자각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해석은 한국인원폭피해자들의 ‘사회문화적 뿌리’를 강조한다(오은정 2013). 구체적으로 한국전쟁을 전후로 과거 일본에 거주하던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밀항과 재입국을 반복할 수 있던 배후에는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으로 체류하던 친인척과의 연결망이 한편으로 존재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 일본 시민운동진영과의 연결망이 존재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송금, 서신, 일본 체류시 주거 제공, 증인역할 등으로 □시민의 회□ 등 손진두 지원 단체는 과거 식민지배의 피해자들과 조우를 통해 식민주의에 대한 ‘강한 감수성’과 과거 식민지배 가해에 대한 속죄(의식)을 지니게 됐다는 해석이다.

손진두 사건에 대한 직간접적인 해석들이 식민지배라는 과거를 직시하게 된 일본 시민들의 자기 책임, 한국인피폭자와의 만남을 통한 충격, 손진두 사건 이전 잇달은 밀항에 이은 강제퇴거 경험 등으로 사건의 전후 맥락의 중요한 단서를 제시했다. 필자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의의를 인정하는 동시에 해결해야 할 숙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첫 번째는 손진두 재판을 지원하는 시민들이

식민주의, 전쟁책임 그리고 출입국관리체제, 재일조선인차별 등에 대해 강한 감수성을 지니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60년대 일본 사회운동은 안보투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미안보동맹, 자민당 정부 타도 등 일국 내셔널리즘에 기초한 운동을 했는데 60년대 후반 이후 식민주의, 아시아, 국적 등 문제로 문제의식이 전환된 배경은 무엇인가? 후술하겠지만 후쿠오카, 히로시마, 도쿄 그리고 손진두를 지지하는 전국시민회 뉴스레터,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한국인 원폭피해자 손진두의 법적인 인정을 재판을 통해 이뤄내자는 것 이외에, 그 배후에는 일본의 이른바 ‘전후 민주’에서 망각된 식민주의와 전쟁 책임, 아시아, 오무라수용소와 입관체제를 둘러싼 재일조선인을 포함한 차별 문제 등을 제기했다. 손진두 사건은 일본 정부가 원폭법에 기초해 일본 국적이 아닌, 한국 국적 원폭피해자를 인정하는가를 둘러싼 인정투쟁인 동시에, 60년대 후반 이후 대두된 식민주의와 전쟁 책임, 아시아, 오무라수용소와 입관체제를 둘러싼 재일조선인을 포함한 차별 문제가 제기된 사건이기도 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제가 손진두를 지원하는 □시민회□에서 환류된 배경으로 1) 밀항이란 월경과 오무라 수용소, 2) 출입국관리체제 반대 투쟁 등 68년을 기점으로 전개된 사건과 운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손진두 사건을 전후로 한 한국 정부와 사회의 원폭피해자에 대한 정책과 태도는 어떠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이 문제는 한일간 법적으로 해결되었으며, 배보상 문제가 있다면 이는 한국의 국내문제라는 것이 기본 태도였다. 즉 원폭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배보상을 요구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 정부의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태도는 국가적 의무의 방기, 의심과 검열에 가까운 것이었다. 김승은(2012)의 선행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던 밀항, 오무라수용소 감금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외교적 거래의 대상이었으며, 1957년 한일간 양해각서에 따라 이듬해 한국으로 송환된 제1진 송환자 대다수는 정부기관에 체포되었다. ‘자이니치’(在日)은 일본에게는 국적을 박탈하고 추방해야 할 대상이었고 한국 정부에게 있어서 일본에 거주했다는 사실 자체가 ‘빨갱이가 될 수 있는 위험’의 대상이었다. 실제 한국전쟁을 직후로 밀항한 사람들에게 대해 국회의원들은 배신자, 총살, 조국을 버리고 도망하는 자라고 비난하고 낙인을 찍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에게 있어서 오무라 수용소 강제송환자 명부는 신원조사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국내안보대책을 위한 중요한 문서였다(현무암 2014, 128).

이는 손진두 사건을 전후로 한 상황에서도 유사했다. 1968년 손귀달 밀항 당시, 한국 정부는 조총련이나 일본 좌익 정당과 연계될 가능성을 우려해 빠른 송환에 합의했다. 손진두 사건 이후 한국에 지원을 위해 방문한 일본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감시가 잇따랐다. 원폭피해자들이 “노랑병”이라고 불리는 백혈병 등으로 인한 차별을 받은 것 외에도, 1970년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 1974년 문세광 사건을 전후로 한 시기, 한국인원폭피해자들은 “일본 출생”이란 사실 자체가 불운시되는 열악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임을 드러내기 어려웠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도 이런 조건 속에서 비정치적인 활동을 주로 전개했다. 구호금, 의료 등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협회는 활동했으며 일본 핵금회의 등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옅고 온건한 단체와 교류가 이뤄졌다. 자유로운 해외 방문이 제약된 시기에 한국인원폭피해자들은 한일정부로부터 배제됐으며, 한국 내 조직적인 움직임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개별적 밀항-일본 시민사회

단체의 지원-소송과 재판' 이외 한국인원폭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다.

그렇다면 사건이 일어났던 1970년을 전후로 어떤 일본 사회내 변화가 일본 시민사회의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했는지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자.

맨 먼저 주목해야 할 흐름은 1969년부터 1971년 간에 활발하게 전개된 출입국관리체제 반대운동이다. 베헤이렌, 조총련, 화청투 등 국민국가와 국경을 넘는 국제적 연대 형태 - “아시아와의 만남” (미즈노, 문경수 2016, 197) - 로 전개된 이 흐름이 발생한 배경은 일본 정부의 입관법안 상정 때문이었다. 입관법은 표면적으로 불량외국인의 범죄 빈발에 대처하기 위한 명분이었지만, 실제로 재일, 중국인에 대한 통제 강화와 반전 외국인, 탈주병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미즈노, 문경수 2016, 197). 1969년 3월(제1차 법안상정, 폐기), 1971년 3월(제2차 법안상정, 폐기) 그리고 1972년과 1973년 제3차와 제4차 법안이 상정됐으나 야당 사회당 등의 강력한 반대로 입관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입관법, 더 정확하게 출입국관리체제의 출발은 1947년 제정된 법률 126호이다. 1945년 패전 이전에 일본 국민으로 간주되던 조선인, 중국인 등의 국적을 박탈하고 외국인으로 등록할 것을 명한 법안이 법률 126호이다. 이후 30년간 재일조선인, 중국인 등은 국적을 빼앗긴 채 기본적 권리를 부정당하고 국민 범주에서 배제된다. 이러한 분할선은 각 민족에 따라 동아시아의 영토를 재배치하는 작업과 병행되었고 귀환이 본격화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일본이 전쟁수행의 도덕적, 정치적 명분으로 내세워 왔던 ‘다민족 공영 제국’ 건설의 기획의 허구성이 드러나는 동시에, 이들의 배제로 단일민족신화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 이들은 미군의 관리 하에 남한으로 ‘귀환’하거나 ‘조선 출신 비일본인’임을 스스로 밝히고 신고, 등록함으로써 ‘단일민족 국민-국가’ 일본의 가장자리에 붙들려 있어야 했다(차승기 2014, 316, 319).

일본 정부는 스스로 일으킨 식민지 전쟁과 식민주의에 대한 자기비판은 생략한 채, 이들을 외국인으로 등록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패전 이후 일본공산당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던 재일조선인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이뤄졌다. 1950년 한국전쟁 전후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급증한 밀항자, 일본 내 좌익활동 참여자 등은 후술할 오무라수용소에서 관리하고, 강제 송환을 강제했다.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된 뒤 ‘협정영주권’ 신청을 통해 재류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으나 일본 정부는 그 자격을 엄격하게 해서 송환자가 속출하는 등 반발을 샀다. 더군다나 1966년부터 2년에 걸쳐 영주권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일본교육을 받도록 강제하는 “외국인학교법안”이 상정되어 민족교육 말살과 외국인에 대한 동화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이 시기를 즈음해서 재일외국인의 입관법, 입관체제에 대한 반대 투쟁이 본격화됐다. 1969년 3월 1일 법적지위 요구 관철, 입관령 개악분쇄, 외국인학교법안 반대 데모가 총련과 민단의 연합으로 대규모로 전개됐다. 뿐만 아니라 대만인에 대한 차별과 추방, 이로 인한 이지성의 자살 등으로 화교청년투쟁위원회(화청투)가 결성되어 입관체제 반대 운동이 격렬해 졌다.

두 번째로, 입관체제 반대운동과 더불어 전개된 것이 ‘오무라 수용소 해체운동’이었다. 1950년 10월 나카사키에 만들어진 오무라수용소는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강제로 송환하기 위한 “배 기다리는 대기소”로 불렸다. 하지만 실제 1975년 검거된 밀입국자 가운데 해안검거자 수는 단 1%에

불과했다. 그 외에는 수년간 살아온 사람들이 출두하거나 체포됐던 것이다. 이는 밀항자와 정주자간의 거의 동일한 상황임을 드러내 준다(현무암 2014, 133).

60년대 후반까지 일본 사회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오무라 수용소는 밀항자의 배후에 존재했던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고 아시아인에 대한 퇴출과 이를 위한 장기 수용을 위한 강제송환제도의 일환이었다. 오무라수용소의 목적은 피수용자들에게 귀속될 국가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배분함으로써 예외를 남겨놓지 않는 것이었다(차승기 2014, 332). 동시에 불법입국자들을 오무라수용소에 가두고 그들의 ‘본국’으로 송출하는 행위는 전후 일본의 과거 시간, 즉 식민지/제국 일본의 시간을 ‘봉인’ 함으로써 ‘단일민족 국민-국가’ 일본의 시간적-공간적 불안을 야기하는 존재들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기획의 일환이었다(차승기 2014, 321). 오하라 수용소는 추상기능을 하는 물리적 장소일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범죄자의 현실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가상의 공간이었다(현무암 2014, 122-123). 바로 식민주의의 살아있는 상징이 바로 오무라수용소였다. 오무라수용소가 일본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베트남전 반대운동이 전개되면서 부터였다. 시민이 중심이 된 베트남전 반대운동을 전개하던 ‘베헤이렌’은 반전 탈주병을 제3국으로 보내기 위한 반전탈주병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1969년 3월 31일 오무라 수용소 앞에서 최초로 입관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며 베헤이렌은 걸으로는 아시아와 연대를 언급하며 김동희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반성했다(현무암 2014, 103).

1967년 한국인 탈주병 김동희의 망명 요청을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김동희와 지원단체는 “강제퇴거 처분취소 소송”을 제출하게 되고 형기가 정해지지 않은 수용소 오무라는 그 모습을 일본 사회에 드러내게 된다. 1969년 3월 여러 차례에 걸쳐 베헤이렌과 전공투는 “오무라해체 데모”를 수용소 앞에서 전개했으며, 1969년 이후 오무라에 수용됐던 재일조선인 임석균(필명 박정공)은 책과 강연을 통해 살아있는 식민지배와 식민주의의 상징인 오무라수용소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전후민주주의’ 속에서 누락되었던 ‘식민가해’ ‘아시아와 연대’ ‘민족책임론’ 등 화두가 대두될 조건이 점차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흐름은 60년대 후반을 즈음해서 등장한 사회운동의 변화이다. 우선 베헤이렌을 살펴보면, 기지를 제공하는 등 일본이 베트남전에 깊숙이 간여하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베헤이렌 내부에는 전후민주주의에 누락된 가해자의식, 아시아에 대한 전쟁 책임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오무라 수용소는 거대한 국가폭력일 뿐만 아니라, 일본인 자신들도 국가폭력에 연루된 가해자임을 각인하게 된 계기가 됐다. 특히 1969년을 즈음해서 입관법 개정 반대 등 ‘아시아와 연대’가 제기되며 입관체제에 대한 해체 투쟁이 본격화된다. 베헤이렌에게 ‘조선문제’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민족적 책임’ 문제로 사고됐으며 이를 위해 본토-오키나와-조선인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일본인에게 입관이란, 불쌍한 조선인에 대한 동정이 아닌, 입관과 오무라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물음을 던지는 문제로 사유됐다.

다음으로 전공투 일부의 움직임도 주목해야 한다. 모든 전공투는 아니지만 도쿄대 전공투의 전후민주주의의 기만성과 자기부정이 선언된 이후 전후민주주의가 결한 민족적 원죄, 이른바 “민족책임론”이 제기된다. 안보투쟁 시기 시기까지 평화운동이 ‘유일한 피폭국’ 등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의식을 바탕으로 전개되었기에, 식민지배나 침략전쟁과 같은 가해자의식이 거의 결여되어 있었다. 반면 60년대 후반에 이르면 ‘일본도전쟁에 휘말린다’는 피해자의식 대신

미국에 의한 베트남 개입자체를 비판하는 동시에 이에 전면적으로 협력하는 일본정부의 ‘가해’에 대한 비판이 대세였다(마쓰이 다카시 2012, 143, 150). 전공투 가운데 비섹트 분파들은 일미동맹과 일본 중심의 반공/지역블럭 형성으로 일본인 전체가 ‘새로운 관리자층’이 될 위험을 제기하며 입관반대 투쟁을 제기한다. 특히 1969년 6월, 간사이와 큐슈 전공투가 전개한 입관법 반대 투쟁은 입관체제와 구식민지 출신자 문제에 대한 총체적 인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전후 책임을 방기한 차별의 체계로서 전후 민주주의를 해체하는, 즉 “차별구조철폐”를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화청투의 고발에 자극을 받은 중핵파(中核派)는 “입관결전론”을 주장할 정도로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결국 과거 제국의 신민이었던 한국인 원폭피해자라는 ‘잉여’는 잔여물이 아니라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50년대 이후 구축된 한미일동맹, 한일협정이라는 동아시아 냉전이라는 ‘체제’ 속에서 탄생한, 각각 국민국가의 법질서 구축과 함께 탄생한 존재였다(차승기 2014, 328). 이 점에서 손진두 사건은 한국인 피폭자이자 밀항을 통해 불법으로 입국한 피폭자라는, 다른 장소의 존재를 통해 식민주의라는 과거를 삭제하려는 일본, 더 나아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냉전 체제를 둘러싼 법과 제도를 추궁한 것이었다(현무암 2014, 101). 피폭자 손진두의 밀항은 불법입국이란 불길한 행위가 아닌, 제국 시대부터 존재했던 길을 없애려는 국경 통제관리라는 권력에 대항하는 ‘공간의 실천’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현무암 2014, 110). 주변의 재일조선인, 밀항해 오는 한국인은 아시아의 타자들과 뒤얽혀 있지만 패전으로 좌절된 과거라는 일본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었다. 바로 일본 정부는 오무라수용소, 원폭수첩의 속지주의 등을 통해 ‘불온한 외부’로부터의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불안을 야기하는 과거’의 삭제, 관리하려는 단일한 흐름에 균열을 냈다는 점에서 손진두 사건은 문제적이다(차승기 2014, 322; 324).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毎日新聞

朝日新聞

神戸新聞

中国新聞

福岡新聞

統一日報

社会新報

刊家新聞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河村虎太郎, □身元保証書□, 1973-08-18

孫振斗さんを守る東京市民の会, □孫振斗さんを守る東京市民の会 뉴스□, 1974-06-01 ~ 1975-02-14

孫振斗さんを守る東京市民の会, □孫振斗さんを守る東京市民の会 会報□,

1979-03-21

孫振斗さんに治療を! 全国支援会, □孫振斗さんに治療を! 全国支援ニュース□, 1972  
孫さんを支援する広島市民の会, □孫さんを支援する広島市民の会 会報 復権□,  
1974-08

<孫振斗さんに治療を!>福岡市民の会, □<孫振斗さんに治療を!>福岡市民の会 会報□,  
1974-02

孫振斗さんを守る東京市民の会, □朝鮮人被爆者 孫振斗さんに治療と在留を!□,  
1972-09-15

<孫さんに治療を!>全国市民連合, □孫振斗さんに治療と在留を! 全国支援ニュース□,  
1972

□早く,援護を!□ No.1~60, 1972-02-25 ~ 1976-04-20

朝鮮人被爆者孫振斗さんの原爆手帳要求訴訟に支援を!

<孫さんに治療を!>全国市民連合 19720400

在日朝鮮人に対する日本帝国主義の植民地主義的弾圧を糾弾告発する闘争委員会,  
□「被爆者建康手帳交付」「日本入国,治療」を要求する在韓一万五千被爆者に対する  
日帝"韓国"権力による「要求拒否」の弾圧粉碎へ決起せよ!!□, 1970-08-01

□[孫振斗]診断書 福岡東病院□ 田中正人, 1972-03-03

ベ平連 編集部, □ベ平連ニュース 縮刷版□, 1965~1974,

ベトナムに平和を!市民連合

## 2. 2차 자료

### 1) 한국어 문헌

가와이 아키코, 「버림받은 한국 原爆피해자」, □月刊朝鮮□ 118('90.1) pp.448-460  
국무총리실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조사과, □내 몸에 새겨진  
8월□, 2008, 국무총리실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권혁태, 「1960년대 일본의 사회운동과 ‘자기부정’의 사상 : 출입국관리체제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106, 2015.

권혁태, 「국경 안에서 탈/국경을 상상하는 법: 일본의 베트남 반전운동과 탈영병사」,  
□동방학지□ Vol.157, 2012

권혁태, 「두 개의 아토믹 선샤인」, □황해문화□ 72, 2011, 18-35, 새얼문화재단

권혁태, 「베트남 파병을 ‘거부’한 두 한국군 병사 김이석과 김동희」,  
□황해문화□ 84, 2014.9, 238-257

권혁태, 「히로시마/나가사키의 기억과 ‘유일 피폭국’의 언설」, □일본비평□ (1),  
2009, 60-89,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김동현, 「韓國의 原爆被害者」, □新東亞□ 108('73.8), pp.218-247

김영미 외, □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 2 - 평화선·북송·6차 회담 :  
예비교섭.청구권□, 동북아역사재단, 2008

김예림, 「현해탄의 정동 -국가라는 "슬픔"의 체제와 밀항」, □石堂論叢□ Vol.49,  
2011

김용덕, □(해방 전 제일동포 관련)신문기사 자료집□, 2009, 동북아역사재단

김재근, 「한국원폭피해자의 현실」 『신동아』 1968년 3월호 pp.179-187

김정경, 「아직도 히로시마를 떠도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원혼들」,  
□길을찾는사람들□93(8), 1993., 111-113, 월간 사회평론길



- 김종성, 「원폭피해자들의 삶과 소외 의식의 형상화」, □새국어교육□ 65, 2003, 285-302, 한국국어교육학회
- 노은명, 「일본의 출입국관리체제 반대운동 연구 : 1969~71년 일본인의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22, 2009
- 다카하시 히데토시, “ '야스쿠니'와 '히로시마' ”, 전진성 편, □기억과 전쟁- 미화와 추모 사이에서□, 휴머니스트, 2009
- 마쓰이 다카시. 「1960년대 일본에서의 사회운동」, □역사문제연구□, (28), 135-159, 2012
- 미즈모토 가즈미, 「히로시마의 평화인권운동 - 군사도시에서 평화도시로」, □4.3과 역사□ 5, 2005, 161-176, 제주4.3연구소
- 미즈노 나오키, 문경수, □재일조선인 - 역사, 그 너머의 역사□, 삼천리, 2016
- 박경섭, 「조선인원폭피해자와 초국적 시민(권)」, □현대사회과학연구□ 13, 2009, 153-166,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박성실, 「한국원폭피해자의 사회적 고통, 그 구성과 대물림」, 2015,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논문
- 반용기, 「피폭자의 삶과 고통의 세월」, 『현대사진영상학회』, Vol.4, No.1, 2001
- 배진수,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47년」, □기독교사상□ 404('92.8) pp.26-34
- 쓰카 고헤이, □히로시마에 원폭을 떨어뜨리는 날□, 서울 : 小説文學社, 1987
- 오사다 아라타, □원폭의 어린이 : 히로시마 피폭 어린이들의 수기□, 서울 : 學文社, 1996
- 오은정, 「한국 원폭피해자의 일본 히바쿠샤(被爆者) 되기」, 2013,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박사논문
- 이성주, 「어느 原爆피해자의 45년 哀史」, □月刊中央□ 175('90.8) pp.278-287
- 이실근, □나의 히로시마□, 2015, 논형
- 이우정, 「한국원폭피해자실태」, □한국YWCA□ 138('78.7), pp.10-16
- 이장규 外, 「국내 원폭 피폭자에 대한 의학적 관찰 및 조사」, □원자력연구논문집□ 10,2-2('70.11), pp.41-46
- 이정은, 「‘ 난민 ’ 아닌 ‘ 난민수용소 ’, 오무라(大村)수용소 : 수용자·송환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103, 2014.9, 323-348
- 이정은, 「예외상태의 규범화된 공간, 오무라수용소 : 한일국교 수립 후, 국경을 넘나든 사람들의 수용소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106, 2015.6, 77-110
- 이치바 준코, □한국의 히로시마□, 2003, 역사비평사
- 이현숙, 「히로시마 원폭 48년 그 현장을 가다 1 : 원자폭탄의 피해는 유전되지 않는다?」, □길을 찾는 사람들□ 93(8), 1993, 103-110, 월간사회평론길
- 이화준, 「한국과 일본의 선택된 기억과 피해자의식: 양국의 기념관을 중심으로」, □社會科學論集□ 45(1), 2014, 1-24,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임상민, 「울트라맨과 재일조선인의 국적변경 문제-우에하라 쇼조 「괴수술사와 소년」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41, 2013, 161-179, 한국일본근대학회
- 장미현, 「1960년대 일본조선연구소의 '식민사상' 제기와 '고도성장체제' 비판」, □역사문제연구□ No.27, 2012
- 전갑생, 「오무라(大村)수용소와 재일조선인의 강제추방 법제화」, □역사연구□ 28, 2015.6, 165-201
- 전갑생, 「일본의 불편한 진실 담긴 '조선인 송환' 문건 감추기」, □민족21□ 147, 2013.6, 108-116
- 전갑생, 「한국전쟁기 오무라수용소(大村收容所)의 재일조선인 강제추방에 관한

연구」, □제노사이드연구□ 5, 2009.2, 13-44  
 정근식, 「전쟁기억과 재현을 둘러싼 지역정치」, □일본비평□ (2), 2010, 156-203,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조경희, 「불안정한 영토, ‘ 밀항’ 하는 일상 : 해방 이후 70년대까지 제주인들의 일본 밀항」,  
 차승기, 「수용소라는 안전장치-오무라(大村)수용소, 폴리스, 그리고 잉여」,  
 □한국학연구□ 31, 2014.3, 315-337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그날 이후-한국인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기록□,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89.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 원폭피해자 실태보고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8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원폭피해자 65년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  
 허광무, 「전시기 조선인 노무자 강제동원과 원폭피해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지역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20, 2011, 5-55, 한일민족문제학회  
 허광무,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제연구와 문제점」, □한일민족문제연구□ 6, 2004, 93-1  
 김승은, 「재한(在韓)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과 교섭태도(1965~1980)」, □아세아연구□ 통권 148호, 2012  
 현무암(2014), 「밀항·오무라수용소·제주도: 오사카와 제주도를 잇는 ‘ 밀항’ 의 네트워크」, □재일제주인과 마이너리티□,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현무암, 「한일관계 형성기 부산수용소/오무라수용소를 둘러싼 ‘ 경계의 정치’ 」, □사회와역사□ 106, 2015

## 2) 일본어 문헌

井上学, 「6·8 ‘ 大村収容所’ 解体集会」, □朝鮮研究□ 87, 1969. 7  
 高橋 栄夫, 「大村収容所と民族国家止揚」, □朝鮮研究□ (86), 14-23, 1969-06  
 野村宏志, 「在日朝鮮人の在留状況と国籍問題--入管法を理解するにあたって」, □朝鮮研究 (97), 2-17, 52, 1970-08  
 佐藤勝巳, 「出入国管理令と在日朝鮮人--入管法を理解するにあたって」, □朝鮮研究 (98), 12-32, 1970-10  
 林鳳, 「入管当局の協定永住権取得強要の実態--入管留置場体験記」, □朝鮮研究□ (99), 2-10, 1970-11  
 「法務省発表の入管令改正理由(資料)」, □朝鮮研究□ (102), 10-16, 1971-02  
 萩原セキ子, 「入管法反対運動のなかで」, □朝鮮研究□ (105), 28-38, 1971-06  
 佐藤勝巳, 「協定永住権と入管令(朝鮮を知るために-3-)」, □朝鮮研究□ (106), 30-33, 1971-07  
 和田純, 「「行政訴訟」とは何か--現行入管令49・50条に関連して」, □朝鮮研究□ (136), 54-59, 1974-05  
 田中宏, 「定住外国人の地位・処遇を考える--崔正雄青年の退去強制について(入管体制を考える<特集>)」, □朝鮮研究□ (187), p4-13, 1979-03  
 中平健吉, 「再入国許可の法的性質(入管体制を考える<特集>)」, □朝鮮研究□ (187), p14-16, 26, 1979-03  
 秋山幹男, 「マクリーン事件と出入国管理体制(入管体制を考える<特集>)」, □朝鮮研究□ (187), p18-26, 1979-03  
 内海愛子, 「「国益」と出入国管理体制--朝鮮の統一のための世界会議と入国問題

(入管体制を考える<特集>)], □朝鮮研究□ (187), p27-37, 1979-03  
加藤晴子, □「解決」された法的地位問題--「入管白書」の変化と入管令の改正  
(入管令改正をどうみるか<特集>)], □朝鮮研究□ (211), p2-9, 1981-06  
佐藤勝巳, 「衆議院法務委員会傍聴記 (入管令改正をどうみるか<特集>)], □朝鮮研究  
□(211), p10-18, 1981-06  
谷口智彦, 「抜きがき・入管白書 (入管令改正をどうみるか<特集>)], □朝鮮研究□  
(211), p19-27, 1981-06  
佐藤勝巳, 「冷厳な現実認識からすべてがはじまる  
(入管令改正をどうみるか<特集>-続-)], □朝鮮研究□ (212), p1, 1981-07  
加藤晴子, 「統計からみた在日韓国・朝鮮人の実態  
(入管令改正をどうみるか<特集>-続-)], □朝鮮研究□ (212), p2-9, 1981-07  
加藤晴子, 「入管令改正に関わる政府側答弁抄録--衆議院法務委員会議事録より(資料)  
(入管令改正をどうみるか<特集>-続-)], □朝鮮研究□ (212), p10-20, 1981-07  
松井清志, 寺沢達夫,  
「藤岡晋元入管局審判課長の証言--在留権闘争の現状と課題(報告)  
(入管令改正をどうみるか<特集>-続-)], □朝鮮研究□ (212), p21-25, 1981-07  
「新入管法全文--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朝鮮研究□ (212), p26-64,  
1981-07  
「『偵察』という危険な火遊び」, □朝日ジャーナル□ 1969. 4. 27  
宮田浩人, 「『アジアの警察官』めざす入管法」, □朝日ジャーナル□ 1969. 7. 13,  
倉田令二郎, 「朝鮮人差別の基本構造-任錫均氏事件におもう」, □朝日ジャーナル□,  
1969. 9. 14  
「在日アジア人になぜ冷たい」, □朝日ジャーナル□, 1969. 10. 19  
田端英雄. 最首悟. 「11月闘争のあとにくるもの」, □朝日ジャーナル□ 1969. 11. 23  
酒井武史・上野武, 「70年型ナロードニキの胎動(1)学園から地域闘争へ- 第一回全国地  
域シンポジウムをみる」, □朝日ジャーナル□, 1970. 8. 23  
劉彩品, 「絶縁書」, □朝日ジャーナル□ 1970. 9. 13,  
津村喬, 「中国を選んだ台湾女性劉彩品」, □朝日ジャーナル□ 1970. 7. 19,  
山田恒史, 「国籍書換えに見る日本人の驕り -"入管法"を前に朝鮮人問題を考える」,  
□朝日ジャーナル□ 12(40), 10-15, 1970-10-11  
呉林俊, 「差別を拡大するマスコミ -"入管法"を前に朝鮮人問題を考える」,  
□朝日ジャーナル□ 12(40), 17-22, 1970-10-11  
「入管の歴史のなかで -大村収容所の20年(特集)」, □朝日ジャーナル□ 14(11), 33-35,  
1972-03-17  
小田実, 「キツネウドン大王」たちの歴史 (大村収容所の20年(特集)),  
□朝日ジャーナル□ 14(11), 36-39, 1972-03-17  
「資料・警備の状況--「大村入国者収容所二十年史」から -大村収容所の20年(特集)」,  
□朝日ジャーナル□ 14(11), 40-43, 1972-03-17  
「大村収容所事件年表--「大村入国者収容所二十年史」から [昭和26年2月~45年9月  
]-大村収容所の20年」, □朝日ジャーナル□ 14(11), 44-48, 1972-03-17  
鄭栄桓, 「入管法改定と再入国許可制度の再編 :  
「みなし再入国許可」制度と在日朝鮮人」, □法律時報□ 84(12), 34-38, 2012-11  
絳秀実, □1968年, ちくま新書□, 2006  
朴正功, □大村収容所□ 京都大学出版会 1969  
朴順兆, □韓国・日本・大村収容所□, JDC, 1982

金 東希, 「大村収容所からの手紙」, □展望□ (通号 110) 1968-02, 55~59  
 玄武岩, 「密航・大村収容所・濟州島--大阪と濟州島を結ぶ「密航」のネットワーク」,  
 □現代思想□ 35(7) 2007-06, 158~173  
 孫振斗さんに治療と在留を!全国市民の会編集委員会 編,  
 □朝鮮人被爆者孫振斗の告発□, たいまつ社 1978  
 中島竜美, 「ヒロシマの加害責任を問う--孫振斗「手帳裁判」の意味するもの」,  
 □朝日ジャーナル□ 17(35) 1975-08-15, 97~100  
 平岡敬, 「黙殺との戦い--被爆朝鮮人・孫振斗さんの訴え」, □世界□ 通号 345,  
 1974-08, 235~241  
 平岡敬, 「国家と被爆者--孫振斗氏勝訴の意味(日本の潮)」, □世界□ 通号 391  
 1978-06, 323~326  
 吉留路樹, □大村朝鮮人収容所□, 二月社, 1977  
 梶村秀樹, 「Ⅲ. 入管法・外登法と在日朝鮮人」, □梶村秀樹著作集□ 6, 1993.  
 全共闘白書編輯委員会 編, □全共闘白書□, 新潮社, 1994  
 藏田計成, □新左翼運動全史□ 東京: 流動出版, 1978  
 小田實 編, □市民運動とは何か: ベ平連の思想□ 徳間書店, 1968  
 森宣雄, □臺灣/ 日本-連鎖するコロニアリズム□, 東京: インパクト出版會, 2001  
 法務省大村入国者収容所 [編], □大村入国者収容所二十年史□,  
 法務省大村入国者収容所 1970  
 テッサ・モーリス＝スズキ, 「戦後日本の出入国管理と外国人政策」, 有末賢・関根政美  
 編, □戦後日本の社会と市民意識□, 慶應義塾大学出版社, 2005.

### 3) 영어문헌

Lisa Yoneyama, *Hiroshima Traces: Time, Space, and the Dialectics of Memo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